국회 원구성 타결…법사위원장 결국 한국당

국회의장 민주당
부의장 2명 한국당·바른미래
7월 임시국회 13~26일
국회의장단 13일 선출키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만에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했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한국당에서는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 경선에 등록을 마쳤다. 바른미래당에서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당 출신인 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야는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 등을, 한국당은 예산결산특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 등을, 바른미래당은 정보위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아 위원장 자리를 갖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바른미래당 담당)와 문화체육관광위(민주당)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된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 등 6개 특위도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 위원을 선출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처럼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인사청문회와 각종 법안 처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당분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도 범보수 블록으로 맞서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할 수도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역위원장 여수 갑·을, 고흥·보성·강진·장흥 경선 가닥

광주 8곳 단수추천 갑론을박…18일까지 선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지역 8곳의 지역위원장을 모두 단수로 선정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과감한 경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학 구도에 그대로 안주한 결과라는 것이다.

10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광주지역 8곳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서구 갑(송갑석)과 북구 을(이형석)을 제외한 6곳에서 복수 후보가 공모했는데도 면접도 없이 모두 단수 공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복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엔 조강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단수 후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권리당원 100%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외면하고 면접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위원장에 공모한 인사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일부 지역위원장은 청와대나 광역자치단체 주요 보직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시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로 되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11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지역위원장 선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최소 1곳 정도는 경선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지역위원장 선정과 관련, 민주당 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소 2~3곳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예상 지역구는 여수 갑과 여수 을, 고흥·보성·강진·장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서갑원), 목포(우기종), 나주·화순(신정훈), 영암·무안·신안(서삼석),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등 5개 지역위원장이 단수로 선정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의 변화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의 변화는 당원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지역위원장 경선은 그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 지난 3일~6일 지역실사를 거쳐 9일~10일 면접, 오는 11일 경선지역 및 단수 지역을 발표하는 등 오는 18일까지 지역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靑 참모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인정

민주당 조강특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참모들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계속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임종성 조직부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태호 일자리 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백원우 민정비서관(경기 시흥갑),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시태안군),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시서천군), 한병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박남현 제도개선행정관(창원시 마산합포구) 등 7명의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이 밖에 최근 서울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서울 강남갑),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 사상구) 등 3명도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받았다.

임 조직부총장은 직무대행을 맡을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추천한 분들의 직대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이후 당적을 정리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 지역위원장들의 지역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 한시적 직무대행 체제를 허용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20~21일 전대 후보 등록

예비경선 26일…박광온 최고위원 경선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8·25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오는 20~21일 이틀간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예비경선 투표는 전국 중앙위원 4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당대표 후보자는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각각 압축된다.

이 같이 전당대회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광온 의원이 처음으로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남 출신으로 재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당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경선을 통해 8명을 거른 후 여성 1명을 포함해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외에도 안민석(4선)·유승희(3선)·박홍근·유은혜·전현희(이상 재선) 의원과 김해영·김현권·박주민 의원(이상 초선) 등이 후보군에 들어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전대, 국민여론 10% 반영

전대 룰 갈등 일단락

민주평화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5 전당대회 투표 때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0% 반영하기로 했다.

평화당 정인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9일 밤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 회의를 마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10% 선에서 절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준위 고유 의결 사안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5 전당대회의 투표 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일단락됐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4일 전당대회 투표방식으로 당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1인2표제'(연기명)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날 전준위에서 통과된 당원 1명이 1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1인1표제'를 뒤집은 것이다.

장정숙 대변인은 "90%는 전당원 투표로, 나머지 10%는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여론조사 세칙에 대해선 추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방식과 관련해 일단 온라인투표 방식인 케이보팅(K-voting)을 실시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당원들에게는 ARS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